우암학원 창학67주년 | 취업맞춤형 특성화 선도대학
Goal Smile NAMBU
남부대학교

光州日報

RADIANT XROSSOVER NEW GENERATION RX 발견하라, 감동하라
www.hyosunglexus.com LEXUS
광주전시장 080-384-7733
전주전시장 080-263-7743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586호 1판 (음력 7월 25일) 2017년 9월 15일 금요일

르포 / 위기의 삼호중공업·대불산단을 가다

일감 없어 대낮 퇴근 문 닫힌 중소 조선소 "버티는 것도 버겁다"

삼호重 내년 4월 물량 바닥
근로자 3명중 1명 일자리 잃어
공동 진수장이라도 있었으면…

"선박블록이 꽉 차고, 용접 불꽃이 튀고, 절단기의 날카로운 쇳소리가 귀를 때리며 먹먹해야 하는데 야드(작업장)가 텅 비어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지난 13일 오후 4시 찾아가 본 영암 현대삼호중공업 작업장엔 용접 불꽃조차 희미했다. 호텔현대로 가는 중턱에 있는 테니스장에서 내려다보니 야드가 한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 1시간 뒤인 오후 5시 근로자들이 하나 둘 모습을 드러내며 퇴근했다. 현대삼호중공업 관계자에게 "벌써 퇴근하느냐"고 묻자 "일감이 없어서요"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관련기사 3면〉

◇현대삼호중공업 내년 4월이면 물량 바닥＝현대삼호중공업의 연간 생산능력은 대형선박 45척 규모다. 주로 LNG선·LPG선·자동차운반선·컨테이너선 등을 건조한다. 하지만 지난해 건조한 선박은 39척, 올해 목표는 30척뿐이다. 수주 물량이 없어 감산하는 것이다.

일감이 줄다보니 근로자도 일자리를 잃었다. 2015년말 1만4000명이 넘었던 현대삼호중공업 근로자 수는 현재 9200여명 수준이다. 3명 중 1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이다.

문제는 내년이다. 수주실적이 좋지 않아 잔여물량이 겨우 23척 뿐이다. 이대로라면 내년 4월이 되면 일감이 떨어지게 된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올해 15척을 수주했지만, 이미 수주한 물량 17척을 잃었다. 저가공세에 나선 중국에게 빼앗긴 것이다. 그것도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들이어서 타격이 크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회사측은 '버티기 작전'에 돌입했다. 노사협약으로 근로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5시로 1시간 단축했다. 고정 잔업을 없앤 것이다. 그만큼 임금은 줄어들게 된다. 또 여름휴가도 1주에서 2주로 늘렸다. 그래도 버티기 어려워 전체 직원이 5주간 유급휴직에 들어가기로 했다.

일자리를 줄이기보다는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 불황을 버텨내자는 전략이다. 현대삼호중공업 관계자는 "그동안 어렵다, 어렵다 했는데 진짜 어려움이 닥쳤다"며 "모두가 참고 견뎌 생존해야 한다"고 불황의 고통을 전했다.

◇중소조선소 "플로팅 도크가 생명줄"＝현대삼호중공업에서 차량으로 10분거리의 대불국가산업단지. 중소형 조선업체들이 몰려 있는 곳이다. 하지만 이 곳도 적막했다. 소등교 옆 공장 3～4곳은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주변엔 잡풀만 무성했다. 근로자들의 불법주차로 늘 혼잡하던 공장 인근 도로는 한적했다.

유동윤 전남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 이사장은 "대불산단 입주업체들은 대부분 대기업 하청업체"라며 "현대삼호중공업 물량이 줄어든데다 STX, 성동조선 물량은 아예 끊겼다. 작년보다 일감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대기업 의존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하철 목포대 산학협력단장은 대안으로 공동 건조 및 진수장(도크) 구축을 제시했다. 중소형 선박 수주 협상때 진수장이 없는 것이 결정적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업체들도 공감했다. 충분한 기술력을 활용한 자체 수주를 통해 선박을 건조할 수 있도록 선박 공동 진수장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유 이사장은 "정부는 공동 진수장의 경우 생산시설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어렵다고 한다"면서 "하지만 대불산단 중소형 조선업체들이 다 망하면 실업문제 등이 터질텐데 그땐 어떻게 할 거냐"고 반문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영암＝전봉헌기자 jbh@

수시모집 ▶ 9.11(월)~15(금)
신 학 과 | 국제한국어교원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 유아교육과
음 악 학 과 | 실용음악학과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내 일자리 어디 있나" 2017 광주권 일자리 박람회가 14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제1전시관에서 '나는 오늘, 내일(job)을 만난다!'란 주제로 열렸다. 지역 대기업, 강소기업 등 220여개 기업이 참여하며 이중 70여개사는 현장면접과 채용을 할 예정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지검, 5·18 당시 軍 헬기조종사 17명 직접 조사

신원 확보 곧 소환…국방부 기록 "UH-1H 등 31대 동원"

5·18민중항쟁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 여부를 수사중인〈광주일보 9월 1일자 6면·9월 8일 6면〉검찰이 당시 헬기조종사 17명의 신원을 확보하고, 소환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5월 단체들은 조만간 헬기기총소사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보고 검찰의 수사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14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5·18 당시 광주로 출격한 헬기 조종사 17명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확보했다. 인적사항 확보 대상은 1980년 5월 18～27일 광주로 출격한 군 헬기조종사들이다. 검찰은 이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소환조사 등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989년 국방부가 국회 광주특위에 제출한 '광주소요사태 분석 교훈집' 등에 따르면 5·18 당시 5월 21일부터 29일까지 광주에는 항공 제1여단 31 항공단과 61항공단 군인 108명이 500MD 12대, UH-1H 11대 등 모두 다섯 기종, 31대의 헬기가 동원된 것으로 됐으며, 운항시간은 827시간으로 기록돼 있다.

특히 기총소사를 한 헬기로 추정되는 'UH-1H' 기종은 모두 11대가 동원됐으며, 1대당 최소 조종사와 부조종사 2명이 탑승하는 것을 감안하면 22명 이상의 탑승자가 기총소사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광주지검은 이들 중 헬기기총소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조종사 17명의 신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날부터 54개 상자 분량의 1995년 당시 중앙지검 수사 기록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고 조비오 신부의 유족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이 사건의 쟁점인 헬기사격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헬기 사격 목격담을 남긴 조비오 신부에 대해 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허위 주장을 한다고 비난해 조 신부 유족으로부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정수만 전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은 "5·18 관련 기록을 살펴보면 당시 코브라, 500MD, UH-1H 기종 등 모두 31대가 투입됐다"며 "유족회에서 당시 헬기 탑승자 명단을 확보했으나, 행방은 알 수 없어 헬기 사격 조사를 이어갈 수 없었다. 그래서 이번 검찰조사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매년 1000억 소요…광주 '도시재생 뉴딜사업' 험로

국고보조 50% 그대로
정부 연내 전국 70곳 선정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 절반을 지자체에 떠넘기면서 재정력이 취약한 지자체는 도시재생 사업도 못할 처지에 놓였다. 구도심 쇠락 지자체 대부분이 예산이 없어 자체 사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정부가 국고보조율을 각 지자체의 형편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재정이 열악한 광주시와 자치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만 매년 1000억원에 가까운 재정을 투입해야할 것으로 보여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토부는 14일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갖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 국고보조율을 기존 50%에서 광역·특별자치시 50%, 기타 지방은 60%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연평균 재정 2조원, 기금 4조9000억원의 공적재원 및 연간 3조원 이상 공기업 투자를 유도해 재생지역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기존 도시재생은 국토교통부 소관의 국비만 지원했으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비 지원을 연평균 15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방비(연평균 5000억원)와 각 부처 사업(연평균 7000억원)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재생이 필요한 낙후지역일수록 지방재정이 열악한 현실을 감안해 국비 지원 비율을 확대했다고 밝혔으나, 광역시와 특별자치시를 제외하면서 광주시는 혜택을 받지 못할 예정이다. 사업비의 절반을 광주시와 자치구가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시와 각 자치구는 경제기반형(총사업비 500억원), 중심시가지형(300억원), 주거지지원형(200억원), 일반근린형(200억원), 우리동네살리기(100억원) 등 유형별로 1～2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소 650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광역지자체 최대 3곳씩 자체 선정, 중앙정부 15곳 선정, 공공기관 제안 공모 10곳 등 모두 7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을 선정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는 20일 호남·제주 설명회 등 지역별 여론을 수렴한 뒤 9월 말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확정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고보조율을 50%로 못박을 것이 아니라 재정이 열악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구분해 적절한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일률적으로 국고보조율을 적용하면 쇠락한 지역이 사업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